“시내버스 파업은 노사 문제”… 광주시 ‘수수방관’

파업 사흘째 시민 불편 커지는데 중재 노력 없이 ‘뒷짐’
1400억 ‘혈세 투입’ 준공영제 운영…적극 목소리 내야

광주 시내버스 노조의 전면 파업이 사흘째를 맞으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노사 간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가 세금을 들여 ‘준공영제’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 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는커녕, “노사 문제”라며 방관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데 따른 비판이다.

11일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시내버스 노·사 간 자율 교섭이 6차례 열리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3차례 이어지는 등 총 9차례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한 번도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당사자끼리 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광주시의 소극적 행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2007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회사 적자를 메우는 데 세금 1400여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노사 협상에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노동청 조정위원이나 노사상생팀 등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시는 움직이지 않았다”며 “버스회사 사용자측도 먼저 어떻게 교섭을 할 건지 안을 들고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협상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도 광주시의 중재를 바라는 듯한 입장이다.

임동춘 광주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시민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사 양 측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다 보니 자칫 파업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광주시가 파업으로 투입한 대체운전원 등의 피로도가 커질 경우 비상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보다 적극적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당장, 이날 광주 시내버스는 전체 1000대 중 799대를 운행, 운행률이 전날 88%에서 79%대까지 떨어졌다.

광주시는 당초 파업 기간 동안 운행률을 80%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운행률 급감은 이날 새벽 4시께 광주지역버스노조 위원장이 일부 조합원들과 북구 대창운수 차고지에서 버스 운행을 저지했기 때문으로, 지역버스 노조측은 전체 버스노조 입장과 달리, 해당 회사 노조 지부장 주도로 조합원들에게 ‘파업 불참 및 준법운행’ 공지 문자를 보낸 데 항의하기 위해 차고지를 찾았다가 이같은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임 이사장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은 업종 특성을 고려하면 광주는 파업을 할 여건이 못되는데, 노조 측의 요구 조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는 500여명 규모의 조합원이 모여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연봉 8.2% 인상, 65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현충일 연휴 3일간 준법 투쟁을 해 왔지만 지난 9일부터 전면 파업을 재개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이상 저온피해 배추 농가 ‘재해’ 인정

농촌진흥청, 해남 100ha 추정…수확 전 꽃대 올라 상품가치 떨어져

정부가 올해 초 전남 배추 농가를 덮친 이상 저온 피해를 재해로 인정했다. 11일 해남군 등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오는 13일까지 해남과 강진, 완도 배추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2~3월 이상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배추농가가 대상이다.

특히 전남지역 최대 봄배추 생산지인 해남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범위만 100ha로, 전체 봄배추 재배면적 695ha의 1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진과 완도의 피해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배추농가에서는 추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대(抽苔)란 배추가 수확 전에 꽃대를 올리는 현상으로, 상품성이 없어 판매가 어렵다. 배추는 수확기를 앞두고도 꽃대를 올리지 않는데, 지난 3월 12도 이하의 저온 상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추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 관계자는 기온이 낮은 탓에 배추가 생존 본능에 따라 꽃대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남의 경우 봄배추 재배면적이 많은 곳이 아니었으나, 배추가격이 오르면서 재배면적이 늘어나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남군의 봄배추 재배면적은 290ha로, 올해의 40% 수준이었다. 그러나 배춧값이 강세를 띠자 유통인들이 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대폭 늘어났다. 무엇보다 봄배추는 일교차로 인해 재배 난도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복구 계획을 최종 심의, 의결한다. 재해복구비는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1ha 기준 농약대(피해율 20% 이상~70% 미만) 218만원, 대파대(피해율 70% 이상) 484만원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로 열기 식히자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일곡동 대로변에 살수차를 이용해 물을 뿌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도 파산 선고

대유위니아그룹의 계열사인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또 다른 계열사이자 이 회사에 제품 위탁 생산을 맡겨 온 위니아전자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진 지 나흘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3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지난 9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대표이사 위대성)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은 오는 27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을 신고할 수 있으며, 채권자 집회·채권조사는 오는 7월 22일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은 지난 2023년 9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나 지난 4월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 23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앞서 위니아전자는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다만 위니아전자의 경우 파산에 앞서 기업회생을 재신청하는 ‘재도의 회생신청’을 해 파산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더불어 지난달 26일에는 대유위니아그룹의 중간지주사인 대유홀딩스도 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니아는 광주시 광산구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지난 1995년 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로 김치냉장고 ‘붐’을 일으켰으나 최근 가전 업체 간 경쟁 심화, 매출 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위니아는 지난 4월 말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으며 오는 18일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학령인구 늘려라” 전남교육청, 5년 계획 나선다

학령인구정책과 신설·TF 운영…지속가능 전남교육 전략 제시

학령인구 급감 위기 돌파를 위한 전남교육청의 정책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2030 전남글로컬학교 실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소멸과 교육 불균형, 나아가 지역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전남교육 지원 정책과 추진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전남의 인구 추계를 보면 2023년 대비 2040년까지 전체 인구는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46.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학생 수는 2025년 16만9000여명에서 2029년 14만5000여명, 2040년에는 10만7000여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도 교육청은 학령인구정책과를 신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령인구 위기 극복, 지속가능 전남글로컬학교’ 정책 수립을 위한 TF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문태홍 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교육전문직·교육행정직·교직원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진도교육지원청 김미 교육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5개년 계획의 3대 전략은 전남교육 강점의 강화, 지역교육 위기의 완화, 전남글로컬교육 특화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 작은학교 기준 재정립, 농산어촌유학사업 리뉴얼, 지역 맞춤형 글로컬 작은학교 모델 도입, 학교 소규모화 지수 개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 교직원 인사제도 혁신, 작은학교 특성화 강화, 전남글로컬시민교육과정 운영 등 실천 중심의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TF 운영을 바탕으로 정책 초안을 세밀히 다듬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 14~15일 ‘2025 전남 작은학교 교육공동체 아고라’를 포함,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다각적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